

스리랑카: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종식하라

(홍콩, 9 월 16 일, 2009)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오늘 스리랑카의 테러방지법 폐지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모든 이에게 이 온라인 청원에 동참하기를 요청하며, 이 청원서는 스리랑카의 대통령, 의회 대변인 그리고 야당대표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할 더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왜 이 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수 많은 이유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 법의 공포 및 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LTTE의 존재와 그 잔악한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지금 바로 이 행정부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중대한 위협이 있었을 당시부터, 이 법은 악법이었으며 그 조항들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스리랑카 국내 법률가들, 국내 인권단체, 다른 나라의 정부뿐 아니라 국제인권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엔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LTTE에 대한 승리 후, 정부는 이 법에 내재된 요소들이 아직 남겨져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요소들이 출현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들은 항상 이러한 가능성에 직면합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가 국내의 정상적인 법률 체계의 작동을 정지시키는데 사용된다면, 이는 모든 분야에 영원히 적용될 것입니다. 테러, 심지어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나, 만약 사람들이 그러한 가능성들을 선점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정상적인 법적 권한을 포기한다면, 이 악법은 영속화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작동하는 한,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한 한 문서로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당 그리고 정부와 다른 의견에 대한 압박은 합법적인 압력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스리랑카내 정상적인 법의 지배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사법부의 독립을 손상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소송당사자, 법률가 및 심지어 판사들도 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률체계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파괴할 것입니다. 정부 대변인이 주장하는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유지하는 것은 형사조사국과 테러조사국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없이 법의 통제를 벗어나 활동을 지속하게 할 것입니다. 감금된 장소에서 죽거나 고문이 사용되었다는 이야기, 그로 인해 조작된 사건은 끊임없이 보고되지만, 이 법의 존재로 인해 그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할 어떠한 방법도 없으며 이 법은 이러한 주장들을 무력화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찰체계는 붕괴하였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개혁에 대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테러방지법의 보호하에 스리랑카의 경찰은 지속적으로 타락할 것이며, 그 시민들은 경찰의 압력, 부패 그리고 자의적인 폭력하에서 살아야만 하는 아무런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어떠한 법적 의지 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며 또한 대다수는 법의 보호 밖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스리랑카 내외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스리랑카 정부에게 테러방지법을 즉각적으로 폐지할 것을 진지하게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법부는 더이상 특별권력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법의 지배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사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하기: <http://campaigns.ahrchk.net/pealpta/>

아시아인권위: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로비하는 아시아지역 비정부기구입니다.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84 년에 설립되었습니다.